市, 車100만대 생산기지 최우선…道, 고속철도·도로 확충 역점

국고 요청으로 살펴본 광주·전남 내년 주요사업

광주도심하천 생태복원도 건의
여수~고흥 교량 예산 추가 요구
국비 최종 반영때까지 확보 총력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등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들어갔다. 일단 그 첫 걸음으로 부처별 정부안 반영이 우선이지만, 누락되더라도 국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 시·도의 국비신청액 분석을 통해 내년도 핵심 주력 사업을 살펴봤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만이 살길=광주시가 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5년 역점 사업은 크게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광주도심 하천 생태복원, 무등산 복원·개발 등으로 나뉜다. 총 141건의 사업(3조2617억원) 중에서 20건(1934억원)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국비 최종 확정때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및 2015년 자동차 전용 임대산업단지 설계·기술 개발비 등으로 632억원을 요청했다. 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부품 소재센터 건축비와 장비구입비로 249억원을 지원해 줄 것도 건의한 상태다.

시는 국비확보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평동산업단지 3차 예정부지 175만2000㎡와 진곡산업단지 191만7000㎡ 등 366만9000㎡를 기아자동차 핵심부품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중(63%)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 408만1000㎡를 2018년 12월까지 조성한 뒤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추세인 친환경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 광주를 '친환경 그린카의 메카'로 키워낸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광주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도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사업비 880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20억원의 반영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시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 복원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무등산 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을 위한 용역비 4억원과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 사업을 위한 착수금 10억원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사업 대부분이 국비 반영사업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지역 정치권 등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나서=올해 전남도의 가장 큰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사업이다. 예산만 무려 3조14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 전남도는 1조5000억원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50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1조3083억원짜리 남해안철도(순천~목포) 고속화사업, 1조8100억원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도 도는 각각 1500억원과 5000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10분의1인 150억원, 20분의1도 안 되는 217억원만 찔끔 반영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생색내기식 '찔끔 예산'으로 개발 기간 지연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건의액 1000억원 중 733억원이 반영된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사업비 5958억원) 등도 마지막까지 나머지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으로 하반기 예비타당성을 신청하는 국립 난대식물원 조성, 해조류 종합가공단지 조성 등을 비롯한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신규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최종 예산 확정시까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지키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요청 사업비가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미반영됐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된다"면서 "사업비가 반영된 사업은 국회안 통과때까지 지켜내고, 반영이 안된 사업은 추가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2015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목포 신외항 선적장에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수출을 위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예산 요구액 377조…내수 활성화·안전 증액

올보다 6.0% 증가…복지 늘고 SOC 줄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내수 활성화 등 체감경기와 안전 예산에 대한 투자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복지 예산 지출을 늘리고 4대강 사업으로 부풀어 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점차 삭감, 정상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각 부처의 2015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21조2000억원(6.0%) 늘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근의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 국면이 내수 부진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안전 예산은 포괄 범위를 재분류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전면 확충된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 요구됐다. SOC와 산업,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청됐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은 118조원으로 올해의 106조4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10.8%) 늘었다.

기초연금 지원액 7조7000억원, 4대 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지출액 40조3000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기초연금은 2조5000억원, 4대 연금은 3조9000억원씩 지원 요구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 요구와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교육 분야 예산 요구액은 56조1000억원으로 10.7%, 안전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공공질서 및 안전 요구액은 16조8000억원으로 6.3% 각각 상향됐다. /연합뉴스

윤장현 첫 인사는 '조직 안정'

광주시장 비서실장 채영선·대변인 김병수…측근 배제 공무원 선임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26일 비서실장에 채영선(57) 관광진흥과장, 대변인에 김병수(56) 교통안전과장을 각각 내정했다.

민선 6기 첫 인사인 만큼 조직의 안정감 확보를 우선으로 두고, 파격이나 발탁 인사보다는 내부 공무원을 선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방형 인선이 가능한 최측근 자리 두 곳 모두 선거캠프나 측근 인사를 배제하고 시청 내부 관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 당선자는 비행정가 출신 시장의 첫 인사를 앞두고 시청 공무원들이 막연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의 안정감에 방점을 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의 안정성을 이유로 관료 중심의 인선에 너무 치중할 경우, 기존 관료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해 '시민 운동가' 출신 시장의 참신한 색깔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대변인을 포함해 시장 직속으로 돼 있는 개방형 자리인 인권평화협력관·참여혁신단·사회통합추진단 등의 인선시에는 신임 시장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외부 인물의 영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력풀에 한계가 있는 지역 여건상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선거 캠프 출신이나 민선 5기 시절 활약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조건 배척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채영선 과장은 광주일고 출신으로 북구청에서 근무하다 사무관 때 시본청으로 전입해 지난 2012년 서기관으로 승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을 역임했다. 김병수 대변인 내정자는 시의회와 대변인실 공보담당을 하다가 2011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U대회 조직위원회 홍보부장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공직 내부의 평가는 상사는 물론 부하직원들도 '본받고 싶은 동료'라고 말할 정도로 따뜻한 품성과 무난한 업무 스타일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광이 희망광주 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인사의 기준은 선거 캠프와 측근 인사 배제를 기본 원칙으로, 행정의 안정성과 조직의 화합을 우선했다"면서 "경제부시장은 기재부 출신 경제 관료 등을 중심으로 유능한 분을 모시기 위해 지역정치인과 원로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